"생매장 殺처분은 잔인한 동물학살"

국제 보호단체 항의·종교계 반발…구제역 대처 국내외 비난 쇄도

정치권도 "동물복지 차원 접근" 보호법 개정 준비

구제역·AI 확산으로 살(殺)처분되는 소·돼지 및 오리·닭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축 생매장 살처분에 대한 국내외 비난이 들끓으면서 동물 생명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정부의 가축 살처분을 동물 학살로 규정하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국제 동물보호단체도 한국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적 반대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도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 및 검역·방역 과학화 등 '동물복지' 강화를 주장하며 가세하고 있다.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반발=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 동물보호단체인 '세계영농에 대안 연민'(Compassion in world farming)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의 구제역 대처방식에 대한 비난 성명을 올렸다. 이 단체는 "돼지에 대한 생매장 살처분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범을 명백하게 어기는 잔인한 행위"라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살처분이 불가피할 경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도 가입돼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구제역 등으로 동물을 처분할 경우 고통 없이 빨리 죽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청와대와 농림부, 주영 대사관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앞으로 다른 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동물도 감정이 있는 존재라고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구제역 대처를 둘러싼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라(KARA)' 등 국내 동물보호 시민단체도 돼지를 생매장해 살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하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동물복지' 강조=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축 전염병이 시도 때도 없이 전국적으로 창궐한다면 결국 동물의 생명권과 우리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라며 "앞으로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인간의 생명권을 위해 동물의 생명권도 존중돼야 한다"라며 "이제 동물복지를 생각해 보다 근대화되고, 개량화한 가축 축사를 생각해야 하며, 검역이나 방역 문제를 더 과학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가축의 적정한 사육 면적 확보와 질병 관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농장의 복지실태 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살 처분' 산업논리가 우선=정부가 백신 접종이 아닌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하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구제역이 전염성이 대단히 높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체 축산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구제역 청정국'이란 지위를 잃게 되면 수출을 할 없게 된다는 산업논리가 우선한 결과다. 가축을 키우는 농가의 관점도, 소비자의 관점도 아닌 원활한 수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산업의 관점인 셈이다. 하지만 축산업 수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639만9000달러(약 76억7880만 원), 쇠고기 수출량은 7881달러(약 945만원)에 불과했다.

◇종교계, 희생 가축 애도 행사=종교계가 구제역 종식을 기원하고 피해 농가와 희생 가축을 지원하는 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다.

종교계에 따르면 불교계에서는 지난달 30일 가평 백련사에서 가축 영혼의 극락왕생과 구제역 조기종식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열렸고, 오대산 월정사에서도 지난 4일부터 천도기도가 시작됐다. 또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는 지난 6일 천도재를 지내는 등 전국 사찰에서 천도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오는 16일을 '금식 주일'로 선포하고 회원 교회가 금식 헌금을 모아 축산농민과 방역종사자를 위문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13일 오후 2시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구제역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또한, 불교와 카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3~4개 종단이 살처분된 소·돼지 등을 애도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10일 영암군 도포면 덕화리의 한 오리농장에서 작업반원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들을 살처분을 하기 위해 산 채로 구덩이에 밀어넣고 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동식 소각로 설치

전염 가축 처리해야

최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전염 가축 처리를 위한 '이동식 소형소각로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익산시민연합은 11일 "대한민국의 산하가 구제역과 AI에 걸린 수백만 마리의 매몰 가축의 사체로 오염되고 있고 이미 그 현실은 심각한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염 가축을 도살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매몰을 피하고 '이동식 소형소각로'를 현장에 투입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이동식 소형소각로'를 현장에 투입해 소각처리할 경우 바이러스에 의한 공기전파와 2차 오염을 현저히 줄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도 1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형 소각로와 항공방역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뒷북치기 방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에 나선 전국 방역담당 공무원과 축산농민들이 녹초가 되고 있다. 영암 신북의 한 방역초소에서 근무자가 얼어붙은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염 우려 한번 투입되면 창살없는 감옥

방역 공무원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도

전남도내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악전고투하고 있다. 200만 마리가 넘는 닭·오리를 매몰하는데 투입된 공무원들은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기도 한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을 위해 투입된 인력은 977명으로, 이들은 방역초소에서 차단 방역에 나서는 한편, 농가를 돌며 질병 예찰을 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최근에는 도내에서 AI 신고가 22건에 달하면서 AI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역초소 45곳이 별도로 설치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난이 더욱 심화돼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는데도, 농장 인근에 방역초소 설치가 늦어지는 등 대응에 허점이 드러난 것도 이같은 이유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축들을 매몰하는데 참여한 공무원 190여명은 자칫 바이러스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진 채 현지 숙소를 잡아 생활하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AI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동강면에서 방역작업을 맡은 한 공무원은 "한 번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은 보통 사흘에서 일주일간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오염지역에 발을 내딛은 직원들은 AI가 잠잠할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머물며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AI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는 주민과 방역 직원들의 고립생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급기야 보건당국도 구제역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치료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하게 된 축산농과 살처분 동원인력에 대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전국 158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검진 및 상담, 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축산농가에선 살처분 당시의 기억과 공포감, 절망감, 상실감 등으로 인해 PTSD, 불안장애,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해선 정신건강검진 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안정될 때까지 사례관리를 해주게 된다.

복지부는 대규모 가축을 살처분하기 위해 동원된 수의직 인력에 대해서도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번 AI는 언제나 끝날까

전남 2003년·2008년 이어 세번째 발생

손실 규모 역대 최대 기간도 길어질 듯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을 덮치면서 오리 사육 농가를 초토화하고 있다. 특히 영하의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AI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3년, 2008년에 이어 세번째다.

2003년의 경우 나주시 산포면 한 오리농가에서 12월 20일 발생한 AI로 인근 25개 농가에서 22만2000마리의 닭·오리가 매몰됐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만 8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농가에 생계안정자금·농가부채탕감·이자 감면·경영안전자금 등까지 포함하면 모두 19억원에 달한다. 당시엔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어 전남도는 한 달 뒤 AI 종식 선언을 했다.

2년 전인 2008년에는 4월 8일 영암군 신북면의 닭 사육 농가에서 발생, 인근 43개 농가의 닭·오리 등 74만3000마리가 모두 매몰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69억.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 등 간접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223억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2003년에는 12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20일까지 10개 시·군에서 19건(닭 10건·오리 9건)이 발생해 392개 농가 528만5000마리가 살처분됐고 2008년에는 4월 1일부터 5월12일까지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영암, 평택, 논산,부산, 울산, 서울, 춘천, 양산 등으로 확산돼 모두 950논가에서 846만마리를 매몰했다.

올해의 경우 살처분 등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역대 최고 피해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3차례 AI의 경우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는데다, 철새 이동시기가 12월~4월까지인 점, AI 바이러스가 기온이 낮은 경우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와 달리 올해 AI가 진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